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8월 2일 수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강릉은 맛집투어" 로컬음식 방문 상승세...20대 여성 크게 ...	1
江原日報	21면	“전국 7만 라이온과 위대한 봉사자의 길 걸어갈 것”	2
강원도민일보	03면	국힘 당무감사 공고 예정... 총선 대비 '부실당협' 정비 시동	2
江原日報	03면	국제 교류·특례 발굴... 방학이 더바쁜 도의회	3
강원도민일보	03면	도의회 한일국제교류협회 일 토마야현 의회 방문	4
 KBS 춘천	온라인	강원도의회, 일본 도야마현 의회 교류...5년 만에 재개	4
강원도민일보	03면	도 정치권 강특법 3차 개정안 특례 발굴 '지원사격'	5
강원도민일보	03면	도·도의회 워킹그룹 내달까지 3차 개정안 초안작성 돌입	5
 KBS 춘천	온라인	강원도-도의회, 강원특별법 3차 개정 특례 발굴 박차	6
 춘천MBC	온라인	강원특별법 워킹그룹에 도의원 전원 참여	7
 연합뉴스		[의회소식] 강원도의회,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 워킹그룹 참...	8
 MBC 강원영동		발전소 피해만 입는데... 주변 주민 요금 인하되나[1/2]	9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한창수 도의원	10
강원도민일보	04면	도교육청 조직슬림화 6개월 만에 정원 늘리기 질타	11
江原日報	01면	국내 최초 해변 인공서핑장 '서퍼 천국' 양양에 문 연다	12
강원도민일보	05면	휴가철 동해안 상어 출몰 잇따라 관광객 불안 고조	12
강원도민일보	04면	"원주시, 문화도시사업 운영 고발은 문화적 탄압"	13
강원도민일보	04면	춘천지검 "법조타운 매몰비용 지불 근거 없다"	13
江原日報	02면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112년 만에 집으로	14
강원도민일보	01면	폭염 위기경보 수준 '심각' 상향, 중대본 1단계 가동	15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지광국사탑 귀향 의미 크다	15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도내 사립대 의대 강원인 선발 외면	16
江原日報	19면	[사설] 양구~경북 영천 고속도, 3차 정부 건설계획 반영을	17
江原日報	19면	[사설] 가파르게 늘고 있는 1인 가구, 촘촘히 관리해야	18

2023 08 01 ()

강원도민일보

"강릉은 맛집투어" 로컬음식 방문 상승세...20대 여성 크게 늘어

코로나 엔데믹 후 강릉관광 빅데이터 분석 결과



▲ 최근 발생한 산불피해로 위축된 강릉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회의장, 김홍규 강릉시장은 지난 22일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을 찾아 강릉 관광 홍보 및 소비촉진 캠페인을 벌였다. 2023.4.22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코로나 엔데믹 이후 강릉 관광객들의 트렌드는 로컬 미식(음식) 관광테마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시간대는 점심시간대인 낮 12시~오후 2시 사이이고, 외지인들의 경우 20대 여성 관광객의 증가세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젊은 여성 관광객 증가에 부응한 치안, 숙박, 이동수단 등에 대한 맞춤형 정책 도입과 홍보활동이 강화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강릉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관광 트렌드 분석을 위해 '관광 빅데이터 분석 및 실태조사' 용역사업을 실시, 1일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2021~2022년 2년 간 강릉 주요 관광지외의 이동통신사, 카드사, 내비게이션 및 SNS데이터를 종합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관광객의 여행 성향과 니즈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사 결과 엔데믹 이후 관광테마로는 로컬미식 테마 증가세가 가장 눈에 띄었고, 역사 탐방 관광테마도 상승 추세를 나타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한창이던 2021년 4680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관광객이 2022년에 3만 9700명으로 증가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방문지로는 강릉 현지인들은 도심권 방문을 선호한 반면, 외지인들은 경포권을 가장 많이 방문하고, 외지인 축제 방문객은 강릉단오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외지인 방문객의 경우 여성이 2021년 53.7%에서 2022년에는 54.6%로 비율로 증가했고, 20대 여성들의 방문 비중이 가장 높았다.

소비는 식음료 업종의 증가세가 돋보였고, 권역별로는 도심권 소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증가세는 경포권 소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장 많이 소비를 하는 연령층은 역시 오랜 사회생활로 수입 기반을 다진 50대로 분석됐다. 자연·문화자원과 맛집 등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반면, 체류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형리조트 등 숙박시설 확충과 연계 교통편 등은 개선과제로 지목됐다. 심상복 강릉시 문화관광해양국장은 "도출된 관광패턴을 관광객 유치 계획에 반영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관광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7만 라이온과 위대한 봉사자의 길 걸어갈 것”

국제라이온스협회 354-E(강원)지구 총재 이·취임식이 1일 통해 현진관광호텔 4층 컨벤션홀에서 열려 제42대 김대영 총재가 취임하고 제41대 김해중 총재가 이임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할 수 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임기를 시작한 김대영 총재는 취임사에서 “우리나라의 7만 라이온을 비롯해 세계 215개 국가에서 라이온스클럽 활동을 하고 있는 라이온은 위대한 봉사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총재는 “앞으로 역대 훌륭한 총재들의 좋은 사업을 이어가며 힘든 일은 내가 앞장서겠다. ‘혼자 걸으면 길이지만 함께 걸으면 역사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118개 클럽, 3,300명 회원을 믿고 총재직을 맡았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회원들을 믿고, 회원들은 저를 의지하면서 강원지구가 발

동해서 김대영 제42대 국제라이온스협회 강원지구 총재 취임
김 총재·김영만 1부총재·최재홍 전 총재 등 LCIF 기금 전달



◇국제라이온스협회 354-E(강원)지구 총재 이·취임식이 1일 통해 현진관광호텔 4층 컨벤션홀에서 열려 제42대 김대영 총재가 취임하고 제41대 김해중 총재가 이임했다.

전하도록 함께 나아가자. 도와 달라”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강원지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취임식에서 김대영 총재(1

만달러), 김영만 1부총재 등 속초클럽 회원 일동(1만6,000달러), 최재홍 36대 총재(3,000달러), 13개 지역위원장(1만3,000달러), 김정자 12지역 의전

분과위원장, 신옥자 국화라이온스클럽 회장(이상 1,000달러)이 LCIF 재해구호 기금을 전달했다.

또 한상기 354복합지구 전 의장, 김윤재(24대)·김진영(31대)·최재홍(36대)·주선희(38대)·김상호(39대) 전 총재가 각각 100만원의 지구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이·취임식에는 허명연 354복합지구 총재협의회장, 역대 총재인 홍희표 전 국회의원, 김윤재 동해시체육회장을 비롯한 도내 클럽 회원들이 참석했다. 심규언 동해시장,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과 최재석·김기하·심영근·조성운·이한영·문관현·김기철 도의원, 이동호 동해시의장, 고재창 태백시의장, 정정순 삼척시의장, 양희전 삼척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동해, 태백, 삼척, 정선지역 시·군의원들도 자리해 취임을 축하했다. 동해=정익기기자

강원도민일보

국힘 당무감사 공고 예정... 총선 대비 '부실당협' 정비 시동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전국의 풀뿌리 당 조직인 당협의회 정비에 나섰다.

국민의힘당무감사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 전국당협을 대상으로 한 당무감사를 공고할 예정으로, 공고 2개월 뒤 본격적인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10월부터 당무감사를 진행, 이르면 11월 초 결론을 낼 방침이다.

차기 총선을 8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실시되는 이번 당무감사는 지역 관리가 부실한 당협위원장을 골라내고, 총선 공천에 앞서 경쟁력을 갖춘 인물을 배치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번 당무감사 결과는 올 연말쯤 본격화될 총선 공천 작업에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당 안팎 관심

이 쏠린다. 도 정치권에서는 단연 현역으로 활동하면서 원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도내 여당 의원들에 대한 평가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는 원주를 등 공석 상태가 지속돼온 당협위원장 인선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원주를 선거구의 경우 김기홍·최재민 도의원 등 2명이 최근 면접을 마쳤고, 앞서 지난해 진행된 공모에서 면접 절차를 모두 마친 권이중·전병선·박동수·윤용호·장승호·안재운 등 후보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조강특위는 이르면 오는 16일 전체 회의를 열어 면접 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 점검을 한 뒤, 이달 말까지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세훈

2023 08 02 ()
03

江原日報

국제 교류·특례 발굴... 방학이 더바쁜 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일국제교류협회(회장: 최승순) 의원들이 1일 일본 도야마현의회를 방문하는 등 2018년부터 중단됐던 양 의회 간 교류를 재개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회기가 없는 8월 한달을 국제 교류,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 등에 주력하고 있다.

도의원들은 지난달 21일 제321회 임시회를 끝내고 다음달 4일 제322회 임시회가 개최하기까지 한 달 보름여간 지역 현안과 민원을 살피면서 조례 제정, 도정 질문을 미리 준비하는 등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도의회 한일국제교류협회는 2018년부터 중단된 일본 도야마현 의회와 교류 재개에 나섰다. 최승순(강릉) 협회장을 비롯해 심오섭(강릉)·박관희(춘천)·유순욱(비례)·박호균(강릉)·지광천(평창)·양속희(춘천) 도의원이 지난달 31일부터 3일까지 도야마현에 머문다. 방문단은 1일 야마모토 토오루 도야마현의

한일교류협회 3일까지 日 도야마현 방문 5년만에 교류 재개
강원특별법 개정안 워킹그룹 참여 ... 17일에는 부의장 경선

회의장과 다타 하치로 도야마현 지사를 예방하고 이가라시 쓰토무 한일우호의원연맹 회장 주재 간담회에 참여했다. 2일에는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루트, 3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아이노쿠라 합장촌 등을 방문한다.

최승순 회장은 “강원자치도와 도야마현은 2018년 이후 방문 교류가 중단됐는데 다시 이어가게 돼 의의가 크고 양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강원자치도의원들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마련을 위한 움직임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강원자치도

가 도내 시·군 등과 제3차 개정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워킹그룹에 모든 도의원이 참여 중이다.

워킹그룹은 내년 총선 전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준비 중인 특별법 3차 개정안에 포함할 특례안을 검토해 입법과제를 선정한다. 2일 강원연구원에서 행·재정 분야, 4일 같은 장소에서 해양수산 분야 워킹그룹을 갖는 등 다음달까지 도의원, 공무원, 전문가가 참여해 진행된다.

박용식 도의회 사무처장은 “도의원의 워킹그룹 참여는 실무진과 개정안을 직접 만들며 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석인 부의장 선거를 위한 작업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까지 한창수(횡성) 기획행정위원장, 김기해(동해) 도의원, 윤길로(영월) 도의원이 경선 참여 뜻을 밝히고 선거운동을 진행 중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오는 17일 오전 11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부의장 선정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다.

박찬홍 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부의장에 뜻있는 의원들의 후보 등록은 15일까지 받을 방침”이라고 했다.

이헌정기자 together@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 08 02 ()
03



도의회 한일국제교류협회 일 토야마현 의회 방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일국제교류협회(회장 최승순)는 1일 일본 토야마현 의회를 방문해 야마모토 토오루 의장 등과 양 의회 간 현안을 논의하고 기념품을 교환했다. 지난달 31일 일본으로 출국한 협회는 오는 3일까지 방문 일정을 이어간다. 사진제공-강원특별자치도의회

KBS 춘천

2023 08 01 ()

강원도의회, 일본 도야마현 의회 교류...5년 만에 재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일국제교류협회가 이달(8월) 3일까지 일본 도야마현 의회를 방문해 교류를 재개합니다.

이는 2018년 일본 도야마현 의회의 강원도의회 방문 이후 5년 만에 재개된 겁니다.

강원도의회 한일 국제교류협회는 일본 도야마현 지사와 의회 의장을 만나고, 한일우호의원 연맹 간담회 등을 통해 두 기관 간의 교류 활성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최현서

강원도민일보

2023 08 02 ()
03

도 정치권 강특법 3차 개정안 특례 발굴 '지원사격'

도 내달 초안 마련 12월 국회 제출
여야 총선모드에 논의 공전 우려
한기호·권성동 측면 지원 '든든'

강원특별자치도 연착륙을 위한 '강원 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 특례 선별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도정치권도 지원에 나선다.
지난 6월 특별자치도 출범 직후부터

도내에서는 2차 개정안 국회심의 당시 누락된 특례 규정들을 재검토하는 등 3차 개정안에 대비한 특례 발굴 및 정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오는 9월 중 3차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10~11월 중 공론화를 거쳐 12월쯤 정부 혹은 의원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법안제출 시점에 여·야 정치권 모두 '총선 모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관련 논의가 공전될 우려가 크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율) 의원은 도 차원의 강특법 3차 개정안이 마련되기 전 군(軍) 현안과 관련한 별도 법을 발의해 강원특별자치도내 군관련 현안 해결을 측면 지원할 계획이다.
2차 개정안 정부협의 당시 배제됐던 특례 규정들을 엄선해 강특법 개정

안인 기존 군 관련 현행법을 개정하는 형식으로 추진하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부처별 소관 특례를 모두 담아낸 '강특법 개정안'은 국회 모든 상임위원회에 걸쳐 법안 심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군 관련 현행법만을 개정할 경우 국방위원회와 국방부 등의 동의만 도출하면 되는 수월함이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어 강특법 3차 개정안 입법에 큰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행안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후속 개정 작업을 전담하는 상임위로, 행안위 및 정부부처 설득 등에 있어 지원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권성동 의원은 "행안위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상임위원 만큼 소속 위원으로서 강원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세훈 sehoon@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08 01 ()
03

도·도의회 워킹그룹 내달까지 3차 개정안 초안작성 돌입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마련을 위해 강원도내 실무자들이 '특례 추리기'에 나섰다. 목표는 오는 9월 내 3차 개정안 작성이다.
도는 지난 6월 특별자치도 출범 직후, '워킹그룹'을 구성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급로별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차 개정안 초안 작성에 돌입했다. 워킹그룹은 △ '미래산업급로별도시' 목표 구체화 △ 행정·재정·세제 △ 교육 등 3대 분야 총 12개 분과로 구성됐다. 각 분과 회의는 최근 1차 회의를 마쳤다.
워킹그룹에는 도 특별자치국 직원을 비롯해 18개 시·군 특별자치도 특례담당자, 도의원,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도내 대학 교수 등 여러 실무진이 포진해 있다. 다양한 그룹이 참여한 만큼, 3차 개정안에 대한 기대도 크다. 박용식 도의회 사무처장은 "이전에는 도의원

들이 개정안 마련 이후에 관련 조항에 대해 보고를 받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개정안 작성 과정에서 실무진과 함께 참여하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했다.
본지 취재결과, 12개 분과 워킹그룹에서 논의된 특례만 200여 가지를 상회한다. 도 관계자는 "단순 정책과제를 제외하고 법제화 과정을 거치면 최종 특례 건수는 이보다 줄어 들 것"이라고 했다.
도는 오는 9월까지 3차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내년 6월 8일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시행령' 제·개정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행 강원특별법 87개 조문 가운데 11개 조문은 시행령에 의해 적용된다. 도는 정부의 강원특별법 시행령 법령안 입안 시점에 맞춰 오는 10월 전까지 '강원도 맞춤형 시행령' 초안을 마련해 정부 부처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김덕형

2023 08 01 ()

KBS 춘천

강원도-도의회, 강원특별법 3차 개정 특례 발굴 박차



강원특별자치도와 도의회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마련을 위한 특례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도의회는 18개 시군과 함께 3대 분야, 12개 분과별 워킹 그룹을 구성하고, 특례안에 대한 내용 검토와 입법 과제 선정, 법제화 대응 논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특례안을 중점 발굴해 내년 총선 전까지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현서

춘천MBC

2023 08 01 ()

강원특별법 워킹그룹에 도의원 전원 참여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에

강원도의회 의원 전원이 참여했습니다.

워킹그룹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포함될 특례를 검토하고,

법제화를 위한 논리를 개발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고, 행정과 제정

세정과 교육 등 12개 분과로 구성돼

도의회를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도의원들이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미가 크다며 3차 개정안이

내년 총선 전까지 국회를

통과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백승호

bsh@chmbc.co.kr

[의회소식] 강원도의회,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 워킹그룹 참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춘천=연합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도와 시군 등이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 마련을 위해 구성한 분과별 워킹그룹에 도의원 전원이 참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워킹그룹은 특별법 3차 개정안에 포함할 특례 내용을 검토해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대응 논리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 분야, 행정.재정.세재 분야, 교육 3대 분야에 12개 분과로 구성됐다.

도의원들은 각 분과에서 공무원,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9월까지 활동한다.

도 등은 내년 총선 전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박용식 사무처장은 "도출된 개정안을 사후에 보고만 받는 데 그쳤던 것과 달리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 실무진과 함께 참여,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의회.일본 도야마현의회 교류 재개

(춘천=연합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일국제교류협회는 일본 도야마현의회를 찾아 코로나19로 인해 2018년 이후 중단됐던 양 의회 간 교류를 재개했다고 1일 밝혔다.

교류협회 회원과 사무처 직원 등 11명으로 꾸린 이번 방문단은 3일까지 도야마현의회 의장과 지사 예방, 도야마현 의사당 견학, 한일우호의원연맹 간담, 도야마현 현지사찰 등 일정을 소화한다.

도야마현은 일본 혼슈 중서부에 있으며, 면적 4천247 에 인구 약 100만명으로 관광산업이 발달해 있고, 자연환경은 물론 생활.문화.인구 등 여러 면에서 강원도와 비슷한 점이 많은 곳이다.

최승순 한일국제교류협회장은 "앞으로도 문화.예술.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우호 교류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 08 01 ()

MBC 강원영동

발전소 피해만 입는데... 주변 주민 요금 인하 되나

배연환

현재는 전국 어느 지역이나 모두 같은 전기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법이 생기며 지역별 전기 요금을 달리 매길 수 있게 돼 발전소 주변 지역들의 전기 요금 인하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강릉과 동해 삼척에는 모두 8기, 5,670MW 발전 용량의 화력 발전 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삼척 블루파워 2기가 내년부터 상업 운영을 시작하면 2,100MW만큼 더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전기는 지역에서 생산해도 한국전력을 거친 뒤 다시 지역으로 공급되는 중앙집중식이었습니다.

복잡한 송배전 장치를 거치다보니 전기료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이 분산 에너지 특별법인데 에너지를 생산한 곳에서 저렴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을 경우 발전 사업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전기를 판매해 소비자는 한전 혹은 발전 사업자 가운데 더 저렴한 전기를 골라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

"이처럼 분산에너지특별법이 생기며
이미 발전소가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강릉과 동해, 삼척 지역에서는
전기 요금 할인을 요구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력 생산으로 미세먼지 발생 등의
환경 오염 피해를 입는 발전소 주변 주민들에게
전기 요금 인하 혜택을 주고,

송전철탑 건설도 줄일 수 있어
소모적 갈등도 피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전역찬/강원경제인연합회 회장

"(발전소로) 미세먼지라든가
여러가지 공해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송전탑을 머리에 이고 사는 우리 주민들로서는
건강에 치명타를 입고 있는 것인데
당연한 논리로 전력 요금의 혜택을."

발전소 주변의 제조 공장과 데이터 센터 등은
전력 직거래를 통해 더 저렴하게 쓸 수 있어,

지역의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재석/강원도의원

(지난달 10일 제321회 임시회)

"(전력) 직거래를 통한
장거리 송전에 따른 거품을 걷어낼 때
제조공장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전력 다소비 업종의 유치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 따라
발전소 주변 지역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NEWS 배연환(영상취재 배광우)

2023 08 01 ()

江原日報

[동정] 한창수 도의원

한창수 도의원(횡성1)은 2일 오전 10시 횡성공항 먹거리 단지 주차공원에서 열리는 준공식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 08 02 ()
04

도교육청 조직슬림화 6개월 만에 정원 늘리기 질타

“업무 줄지 않아 예견” 등 일관성 비판
“교육청 주관사업 증가 불가피” 해명

속보=조직슬림화를 약속하며 지난 3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 본청 인원 47명을 감원했던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원(본지 2월6일자 웹보도 등)이 다시 본청으로 인력을 불러들인다.

최근 교육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본청 소속 일반직 3명(교육행정 6급

1명, 7급 2명)과 장학사·교육연구사 5명 등 총 8명에 대한 정원 증원이 이뤄진다.

교육청은 앞서 올해 초 현장 지원 강화와 본청 조직 슬림화 등을 표방하며 본청 인원 47명을 현장으로 내보냈다. 그러나 본청 몸집을 줄인지 6개월 만에 다시금 본청 정원을 늘리자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청에서 근무하다 일선 지역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긴 한 관계자는 “사람만 내보내고, 본청이 부담하는 업무는 크게 줄어들지 않아 예견됐던 일”이라며 “전임

교육감 임기 초에도 본청 몸집을 줄이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교육부 정책 등으로 본청이 맡은 사업이 늘어나면서 부득이하게 정원을 늘렸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은 이번에 증원된 인력을 강원특수교육원, 학력업무전담, 방과후·돌봄, 강원특별법, AI교수 학습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의 업무에 투입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주관사업이 늘어 불가피하게 증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민엽

국내 최초 해변 인공서핑장 ‘서퍼 천국’ 양양에 문 연다

도·군, 2028년 완공 추진

세계적인 랜드마크 조성 나서 사업비 460억 국비 확보 관건

강원특별자치도가 국내 최초로 양양 해변에 인공서핑장 조성을 추진한다. 서핑 전용 해변과 연계해 서핑 특화지구 및 국제적인 ‘서퍼들의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도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일원에 인공서핑장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개폐형돔과 인공파도 시설을 갖춰 사계절 서핑을 즐길 수 있고 교육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다. 또 국내에서 가장 많은 서퍼가 몰리는 서퍼비치와 인접해 있어 서핑특화지구 조성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최근 ‘복합해양레저도시 조성’을 위한



◇인공서핑장 ‘코브 모델’ 조감도.

타당성 용역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연내 또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정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국비 확보에 성공할 경우 내년 2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2025년 2월까지 행정 절차를 마친다는 로드맵을 세웠다.

계획대로 추진 시 2025년 3월 착공해 2028년 12월 준공이 가능하다.

관건은 재원 마련이다. 도는 해양수산부에 내년 실시설계를 위한 용

역비 10억원의 반영을 요청했다. 총 사업비는 460억원으로 추산되며 이중 절반가량은 국비를 확보해 추진한다는 것이 도와 양양군의 계획이다. 김명선 강원자치도 행정부지사와 글로벌본부 관광정책과는 지난달 26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인공서핑장 조성사업을 설명하고 정부의 지원을 건의했다. 해양수산부와도 사업 추진을 위한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양양은 국내 최초 서핑특화지구 및 서핑 전용 해변 조성 등으로 특화됐으며 아름다운 자연환경도 보유하고 있다”며 “새로운 레저스포츠로 발전하고 있는 서핑의 국내외 동호인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양양 서핑 교육·복합 레저 시설 등의 국제적 랜드마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휴가철 동해안 상어 출몰 잇따라 관광객 불안 고조

강릉항 인근서 ‘청새리 상어’ 발견 기후변화·수온상승 탓 출몰 증가 피서객·레저활동자 등 주의 당부

최근 들어 동해안에 상어 출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강릉항에 또 다시 사 람을 공격하는 ‘청새리 상어’가 출몰해 관광객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현재 본격 휴가철을 맞아 동해안으로 피서객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라 어업인들은 물론 피서객, 레저활동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1일 오전 10시

26분쯤 강릉항 인근 해상에서 낚시 중이던 레저보트에서 상어가 낚시줄을 끊고 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현장으로 연안구조정과 인근 경비함정을 급파한 해경은 관할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상어출몰 관련 정보 상황을 전파하고 상어출몰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드론을 이용한 연안 순찰과 해상 순찰을 강화했다.

해경은 신고자가 확보한 상어 영상을 군산대 해양생명운영과 교수에게 문의한 결과 공격적 성향이 강한 ‘청새리 상어’로 확인됐다.

청새리 상어는 홍상어목 홍상어과의 바닷물고기로, 바다 속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먹이로 생각하고 가끔 보트나



1일 강릉항 인근 해상에서 발견된 청새리 상어의 모습. 청새리 상어는 바다속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먹이로 생각하고 보트나 사람을 공격하는 위험한 상어로 알려져 있다. 특파원

사람을 공격하는 위험한 상어로 알려져 있다. 앞서 지난 7월 약상어, 청상아리, 백상아리 등 상어들이 잇따라 발견

되거나 혼란된 상황에서 또 다시 상어가 출몰하면서 관광객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관광객 김모(57)씨는 “사람들이 물놀이를 즐기는 얕은 해변까지 상어가 나타나진 않겠지만, 설마 하는 마음으로 불안한 건 사실이다”고 말했다.

현재 전문가들은 동해안 곳곳에서 상어 출몰이 잇따르는 이유로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 온도 상승 탓에 비교적 따뜻한 바다에 사는 상어들이 점차 동해안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 동안 상어 피해 예방을 위해 연안 안전 순찰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상어 발견 즉시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소로 신고 바람겨 물놀이객들과 레저활동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재

강원도민일보

2023 08 02 ()
04

“원주시, 문화도시사업 운영 고발은 문화적 탄압”

허위사실 유포 주장 법적대응 예고

속보=원주시로부터방만 운영을 이유로 고발당한 시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본지 7월 14일자 11면 등) 전 직원 등이 “문화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선에 전 시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사무국장 등은 1일 원주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가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특정 감사 진행 과정에서 시민 노고와 인권을 무시했다”며 “이는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을 무너뜨린 문화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의 문화도시 조성사업 중단 과정에서 소명 절차가 없었다”며 “특히 감사 개시·종료 미통

보는 물론 결과를 공개하면서 비밀 유지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사실이 아닌 부분을 사실인양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는 최근 감사를 통해 지난 3년간 센터의 부적정 운영 등이 확인됐다고 하며, 센터 측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권혜민

강원도민일보

2023 08 02 ()
04

춘천지검 “법조타운 매몰비용 지불 근거 없다”

시, 청구 요청 회신…회수 난항 예고

춘천시가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에 법조타운 조성사업 협약해지에 따른 매몰비용 청구를 요청한 가운데 춘천지검에서 “지불할 근거가 없다”는 의사를 다시한 번 전달하면서 매몰비용 회수에 난항이 예상된다.

1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시는 지난달 양 기관에 이전부지 조성사업 협약 해지 및 매몰비용 2억 123만원에 대한 청구 공문을 발송하고 지난달 말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그 결과 춘천지검은 최

근 “비용을 지불할 근거가 없다”고 회신했다. 춘천지법의 경우 아직까지 회신하지 않은 상태다.

시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도시관리계획구역, 지형현황측량, 부지조성실시설계, 재해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총 5개의 용역을 시행, 총 2억 123만원을 용역업체 측에 지불했다. 더욱이 부지조성실시설계, 재해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용역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중지되면서 용역업체와 정산해야 할 금액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승은



◇1일 112년 만에 고향인 원주로 돌아온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의 부재들이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으로 옮겨지고 있다.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112년 만에 집으로

당분간 부재 형태로 전시… 10일 환수식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귀향이었다. 고려시대 승탑의 백미로 꼽히는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국보·이하 지광국사탑)’이 고향인 원주로 돌아왔다.

1일 오후 ‘112년의 기다림! 1,975km를 돌아서 귀향! 국보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라는 현수막을 붙인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오자 법천사지 유적전시관 앞이 한순간 조용해졌다. 삼삼오오 모여 지광국사탑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흥분이 그대로 묻어났다.

김영진(66) 법천2리 이장은 “지광국사탑이 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고된 타향살이를 하던 탑을 다시 이곳에서 보기 위해 몇 년간 주민들과 환수운동을 벌였는데 바람을 이뤘

다. 탑비처럼 탑도 드디어 법천리 주민이 됐다”며 감격에 쉽게 말을 잊지 못했다. 이윽고 차량 문이 열리고 하나둘 모습을 드러낸 부재들을 지정된 위치로 옮기는 작업이 시작됐다.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이태종 학예연구사의 지휘 아래 관계자들은 긴장의 끈을 바짝 조였다. 자칫 부재들에 작은 충격이라도 가해질까 조심스러우면서도 꼼꼼한 움직임 속에 ‘동면 탑구석 하단’이 첫 번째로 유적전시관 내 자리를 잡자 바라보던 이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이날 먼저 원주로 돌아온 부재는 총 33개 가운데 5년간 보존·복원이 완료된 31개다. 지붕돌인 옥개석과 몸돌인 탑신석은 가장 손상이 심했던

터라 아직 모니터링이 진행 중이다.

지광국사탑의 귀향은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문화재보호법 규정을 따르는 국유 석조문화재가 국내에서 제자리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로 되 돌아온 최초의 국외 유출 환수 문화재이기도 하다.

이태종 학예연구사는 “국민이 많이 볼 수 있는 자리가 이곳이 아닐까 싶어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을 임시 보관처로 지정하고 올 초부터 이전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원주시는 10일 오후 2시 환수식을 하고 부재들을 일반에 공개할 방침이다. 차순덕 원주시역사박물관장은 “내년에 나머지 2개 부재까지 모두 돌아오면 완벽한 탑을 시민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설영기자 snow0@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폭염 위기경보 수준 '심각' 상향, 증대본 1단계 가동

오늘 최고기온 36도 예보

끝모를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일 오후 6시를 기해 폭염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다. 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은 올해 처음이고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강원도 역시 동해, 평창, 태백을 제외

한 도내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2일에도 도 전역에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강원기상청은 이날 도 전역에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또한 영서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5~60mm의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겠다.

2일 도내 아침 최저기온은 영서 23~25도, 영동 25~27도, 낮 최고기온은 영

서 33~35도, 영동 33~36도로 예보된 가운데 강한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높아 당분간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으니 농작물 피해와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더불어 제6호 태풍 카눈이 동중국해에서 정체할 때 뜨겁고 습한 공기를 우리나라로 불어 넣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김정호

강원도민일보

지광국사탑 귀향 의미 크다

근현대사 수난의 역사 간직, 보존대책 고민해야

고려시대 불교미술의 백미로 손꼽히는 국보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 112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광국사탑은 일제강점기인 1911년 일본인에 의해 서울로 옮겨진 이후 일본 오사카로 무단 반출됐고, 국내 송환 후 경복궁 뜰에 있다가 6·25 당시 폭격당하는 등 고된 타향살이에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이번 귀환으로 1975km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고려시대 불교탑의 아름다움을 원래 있던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더불어 탑을 통해 근현대 한국사의 아픔을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향후 합리적인 보존대책과 전시 방식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지광국사탑의 석재 33개 중 31개는 11일 대전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원주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으로 이전했습니다. 완전한 탑 형태가 아닌 서른 개 이상의 부재로 나뉘어 탑의 수난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탑은 운명은 파란만장했습니다. 1915년 일본이 조선 선진화 논리를 알리는 방편으로 개최한 박람회 '조선물산공진회' 메인을 장식하게 되면서 송환됐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탑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1923년 조선총독

부는 3·1운동 이후 민심이 계속 동요하자, 총독부앞에 있던 지광국사탑을 경희루 동편으로 옮기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받은 10여 차례 이견됐으며, 수난은 광복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한국전쟁 때 폭격을 맞아 지붕 부분이 산산조각나 1만2000여 점으로 분리, 훼손됐습니다.

지광국사탑의 복원 작업도 문화재보존사에 기록할 만한 과정이었습니다.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지광국사탑에 대한 '대수술'에 나섰습니다. 레이저로 표면 오염물과 함께 1957년 선부른 복원 작업을 하며 쓰인 모르타르를 걷어내는 등 원형 보존에 치중했습니다. 특히 사라져서 찾을 수 없게 된 부재를, 원래 탑이 있던 법천사지 인근 유사 암석으로 사용해 원재료에 가깝게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탑은 귀환했지만 '완전체'로의 복원까지는 1년여의 시간이 더 남았습니다. 탑의 최종 복원 위치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 다. 처리 과정에 차질 없도록 관계 당국과 지자체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의 귀환은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분의 귀환만큼 의미 있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시간에 쫓기지 말고 신중을 기해 작업에 임할 것으로 믿습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8 02 ()
/ 19

도내 사립대 의대 강원인 선발 외면

-지역출신 전국 최하 1~3위 오명, 의무량조차 못 채우다니

비수도권 26개 지역대학 의과대 중 지역인재특별전형 의무량조차 채우지 못한 2곳이 모두 강원지역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의무인원 20%에 미달한 곳은 가톨릭관동대와 연세대 미래캠퍼스(원주)로 각각 14%, 18%에 그쳤습니다. 지역 출신 비율이 가장 낮은 1~3위에 두 대학을 포함해 23%인 한림대까지 도내 사립대의대 3곳이 오명을 썼습니다.

국립대인 강원대가 38%로 가장 높긴 하나, 26개대 지역출신 합격자 평균 52.4%에 비하면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8월1일) 공개한 2023학년도 수도권 제외 26개 의과대학의 지역출신 합격자 교육부 자료에 드러난 실상입니다. 강원지역의 만성적 의사 부족 현상을 초래한 원인이 의사양성단계 초기부터 실패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의대생 정원과 선발의 고질적이고 구조적 문제 해소가 시급함을 시사합니다.

지역인재특별전형은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지역불균형 해소와 지역인재가 그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한 대안으로 2015년 도입됐습니다. 의대 정원이 동결된 상태에서도 꾸준한 성과를 거둬 지역출신 합격자는

2018년 721명에서 23년 1082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지역출신이 지속적으로 남는지는 추적 관찰이 필요하지만, 상위 대학이 인구 대비 의사 비율 높은 지역에 포함됩니다.

반면 도내 의대는 부응하기는 커녕 뒷걸음질 쳐왔습니다. 도내 의대는 국립대 1곳과 사립대 3곳입니다. 국립대인 강원대의대 정원은 49명에 불과한 반면 연세대와 한림대는 각각 93명과 76명으로 월등히 많습니다. 정원이 많은 사립대의대에서 지역인재를 외면해온 결과 강원학생이 의사로 진출할 기회를 뺏고, 필수 의료체계의 붕괴와 무관할 수 없습니다. 올해 지역출신 비율 부산대 81%, 동아대 80%, 전남대 77%, 조선대 64%, 경상국립대 63, 전북대 62, 경북대 61%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강원지역을 부끄럽게 합니다.

열악한 강원 지역의 지역인재특별전형을 50% 이상 의무화하고, 이를 외면하는 의대는 정원을 줄여 국립대인 강원대 정원을 늘려야 합니다. 강원대의대 정원은 125명인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에 비하면 40% 수준으로 적어도 3배 이상 늘리는 것이 빠르게 무너지는 강원 의료체계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江原日報

2023 08 02 () / 19

양구~경북 영천 고속도, 3차 정부 건설계획 반영을

강원특별자치도와 경상북도를 잇는 남북9축 고속도로의 조기 건설을 위해 10개 시·군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가 출범했다. 협의회는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 공동대응 협약서를 채택하고, 양구군~경북 영천시를 연결하는 남북고속도로 경유 시·군의 공동 현안 사업 적극 추진을 약속했다. 특히 남북9축 고속도로가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초대회장인 최승준 정선군수는 조기 추진을 위해 10개 시·군 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간담회 개최를 비롯,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및 경북도의회 의 지원, 10개 시·군의 의 의장단협의회 구성, 지역별 시민단체가 참

강원·경북 10개 시·군 추진협의회 구성
조기 건설 공동 대응 협약서 채택 본격 활동
내륙 잇고 산업벨트 연결 등 경제적 효과 커

여하는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강원·경북지역의 역량을 한데 모아 숙원사업인 남북9축 고속도로 건설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강원 양구~인제~홍천~평창~정선~영월~경북 봉화~영양~청송~영천(노선 연장 309km)을 잇는 남북9축 고속도로는 1999년 정부의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 처음 반영됐다. 하지만 국토종합계획의 전국 10×10 국가고속도로망 중 사실상 유일하게 진척이 없는 노선이다. 20여년이 넘도록 답보 상태였던 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양구~인제~홍천~평창~정선~영월 고속도로’의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해 다시 기대감이 커졌다. 정부는 사전타당성 용역비 3억원을 반영

하고 올해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1년가량 소요된다. 양구~인제~홍천~평창~정선~영월 136km를 연결하는 영월~양구 고속도로가 경북 봉화~영양~청송~영천 구간(173km)까지 완공되면 강원 접경지부터 부산까지 직선으로 이어진다.

건설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가장 낙후한 접경지와 폐광지, 경북북부 내륙지역을 이어준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필요성은 그 어느 사업보다 크다. 또 원주~충주~오송~세종~대덕~전주 등 26개 시·군으로 연결되는 내륙

첨단산업벨트와 설악·태백산~소백산~덕유산~지리산 등 28개 시·군을 잇는 백두대간벨트를 연결해야 한다. 이 벨트들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강원내륙고속도로

가 있어야 한다. 경북이 도와 2012년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업무협약(MOU)까지 하고 협력을 약속했던 이유다. 도로 등 국가기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은 비용·효과 분석을 뛰어넘어 본질적으로 공공성을 담보로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그 기반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구축돼야 한다. 경제 논리를 내세워 비용편익만 따지기보다는 전향적인 접근으로 강원·경북 내륙지방에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한다. 교통망이 확대되면 그동안 발전이 정체됐던 강원남부와 경북북부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남북9축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기대한다.

江原日報

2023 08 02 ()

/ 19

가파르게 늘고 있는 1인 가구, 촘촘히 관리해야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주변과 단절된 1인 가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는 이미 진행 중이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소규모 주거 공간도 늘고 있다. 슬립화 된 일상의 장점만큼 외로움, 불안 등을 호소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혼자 사는 이들은 전 연령에 걸쳐 '균형 잡힌 식사'가 가장 어렵다고 호소한다.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가 쉽지 않다. 배달 음식이 활성화돼 있다지만 소득이 낮거나 일부 고령층에는 대안이 될 수 없다.

1인 가구 증가를 먼저 경험한 외국에선 독거노인들이 모여 살며 공용식당에서 번갈아 식사를 준비하는 커뮤니티형 주거 형태가 등장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더 젊은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수시로 들여다보며 일정 보수를 받는 등 창의적인 복지 프로그램을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1인 가구를 노린 범죄, 고독사 같은 사회적 문제도 함께 나타나는 게 현실이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1인 가구가 4인 가구보다 세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혼자 거주하는 '독거노인'은 8만3,000명에 달했다. 지난달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등록 총조사 방식)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총 가구 수는 69만3,576가

구로 나타났다. 이 중 외국인 가구 등을 제외한 일반 가구는 68만4,895가구로 전년 대비 1만167가구(1.5%) 늘어났다. 일반 가구를 가족 구성원 수로 나눠 보면 도내 1인 가구는 25만4,441가구로 전체 가구 중 가장 많은 비중(37.1%)을 차지했다. 특히 이 중 혼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8만3,000가구로 조사됐다. 도내 전체 가구에서 이들 독거노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2.2%로 집계됐다. 독거노인 가구는 고독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1인 가구 증가로 앞으로 고독사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수명은 길어졌지만, 혼자 살거나 공동체 붕괴로 사회와 연결되지 않는 개인이 많아진 시대에 살고 있다. 한국보다 앞서 정부 대책을 추진한 영국과 일본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한국 사회의 대처는 아직 충분하지 않고, 이제서야 국가적으로 첫발을 뗐다. 지역사회의 관심도 높아져야 고독사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 고독사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회적 고립이라는 시각으로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 고독사, 1인 가구 증가라는 사회 구조의 변화는 더는 출산을 제고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숙제를 안기고 있다.